

역대급 실적 낸 박찬구 ‘용퇴’... 금호석화 ‘전문경영’ 체제로

〈금호석화 회장〉



금호석화, 1분기 영업익 6천억 돌파
고영훈·고영도 사내이사 2인 선임
전문경영체제로 지속가능경영 발판

박철완 전 상무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며 ‘조카의 난’을 마무리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대표이사과 등기이사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내렸다. 금호석화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4일 이사회를 열고 박찬구 대표이사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고영훈 중앙연구소장



고영도 관리본부장

의 사임의사를 수용하고 사내이사 2인을 추가 선임키로 했다. 추가되는 사내이사 2명은 연구개발(R&D) 부문 전문가 고영훈 중앙연구소장(부사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 고영도 관리본부장(전무)이다. 이들은 백종훈 대표와 함께 영업·재무·R&D 중심의 3각 경영의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고영훈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장은 프랑스 CNRS, UPS에서 유기금속 화학 연구부문을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Loker

Hydrocarbon Institute에서 연구원을 지내고 1991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해 30년간 오로지 합성고무 연구에 매진해 온 국내 합성고무 연구의 권위자이다. 향후 제품의 기능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연구개발활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회사는 고 후보가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도 금호석유화학 관리본부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0

년 금호그룹 재무관리팀으로 입사해 30여년이 넘는 현재까지 재무·회계·구매·자금 분야의 전문가로 부서를 이끌어왔다. 안정적인 재무 운영과 함께 금호석유화학의 부채비율은 과거 자율협약에 돌입하던 2009년 660%에서 2020년 말 기준 59.7%까지 낮아졌으며, 2021년 1분기 실적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만큼 회사는 향후 고 후보가 보일 재무적 역량을 기대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오는 6월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두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안건이 가결되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정기주주총회 때 선임된 백종훈 대표이사과 더불어 각 분야의 전문경영인 역할을 수행할 3인의 사내이사를 갖추고 7인의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내부거래·ESG·보상위원회 등)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 또는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거버넌스를 갖추게 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전경련, MSCI에 韓 증시 ‘선진시장’ 승격 촉구 건의

“韓 증시 신흥시장 지수 분류 부적절
펀더멘털·주식규모 고려 승격 충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국제화된 주식시장을 보유한 한국 증시가 여전히 신흥시장 지수로 분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에 한국을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승격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은 한국이 MSCI 선진시장에 편입되어야 하는 근거로 ▲한국경제의 위상 ▲외환거래 편의성 ▲평가의 공정성 ▲투자환경 개선 ▲정보접근성 제고 노력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건의 배경에 대해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주식시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선진시장의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오는 6월 MSCI의 연례 시장분류 작업에 앞서 한국시장의

승격 필요성을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모건스탠리에 설득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6조달러로 전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실물경제 뿐 아니라 주식시장 규모도 글로벌 최상위권이다. 영국 FTSE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증시 지수 산출기관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이유다. 한국은 1인당 GNI 등 MSCI의 선진시장 편입요건 정량지표도 모두 충족한다.

전경련은 글로벌 증시 지수 산출 기관인 다우존스(1999년), S&P(2008년), FTSE(2009년)도 이미 한국 증시를 선진시장으로 편입했음에도 유독 MSCI만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SCI는 한국의 선진시장 편입 불가 사유 중 하나로 역외 외환시장 부재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상 불편을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역외 외환시장은 없지만, 원화는 이미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환전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원-달러 거래액은 전 세계 10위, 기축통화제외 시, 호주달러, 캐나다달러, 스위스프랑, 홍콩달러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MSCI가 주장하는 한국의 역외 외환시장 허용은 거시경제, 통화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특히 IMF에 구제금융 신청 경험이 있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MSCI는 영문 공시자료 부족 및 배당금 사후 결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정보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경련이 국가별 MSCI의 평가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문제를 지적받은 일본에 대해서는 MSCI가

정보전달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양국의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 유독 한국에만 개선필요 등급을 부여한 것은 국제적 형평성 위배 소지가 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MSCI는 그동안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그동안 MSCI가 지적했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간소화, 투자목적 현금대출 제한 해제, 증시 거래시간 연장 등을 투자자 편의개선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MSCI는 한국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주식 시세정보 접근성이 낮아 금융기관이 새로운 지수 인덱스 상품 등을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

“대체육 시장 급성장 2040년 일반육류 추월 韓, 적극 진출 나서야”

무협 ‘대체 단백질 식품’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건강·환경·동물 복지 등 분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대체 단백질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대체 단백질 식품 트렌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 활성화는 소비자의 지속가능성 증시에 따른 장기적 트렌드로, 2035년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체육의 경우 2030년경에는 전 세계 육류 시장의 30%를, 2040년에는 60% 이상을 차지해 기존 육류 시장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체 단백질 식품이란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제조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원료 대신 식물 추출, 동물 세포 배양, 미생물 발효 방식을 통해 인공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 맛과 식감을 구현한 식품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단백질 ‘재배·사육’ 시대에서 ‘추출·발효·배양’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아 ▲대체 단백질 식품군 확대, ▲동물 세포 배양 방식 상용화, ▲기업간(B2B) 생태계 활성화, ▲중국 시장 공략 대두 등 대체 단백질 식품 트렌드 4가지를 제시했다.

대체 단백질 식품의 원조격은 대체육 햄버거다. 2009년 비온드미트가 식물성 대체육 햄버거 패티를 내놓은 이후 대체 단백질은 유제품, 해산물로도 확대되고 있다. 잇저스트는 2017년 녹두를 원료로 만든 달걀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3년 만에 1억개 이상 판매했고 오션허거푸드는 토마토로 만든 참치, 가지로 만든 장어, 당근으로 만든 연어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갑질 적발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
시정명령·과징금 1400만원 부과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포스코건설이 2014년 2월~2019년 4월 기간 중 총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이 기간 중 68개 수급사업자에 철근크리

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또 15개 수급사업자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 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 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 1000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결과 위반금액이 관련 하도급 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가 낙찰제 폐지”, ‘상생협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력 펀드 운영’ 등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 공정거래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